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오늘 선출…당내 갈등 해소 '주목'

김민석·홍익표·우원식·남인순 출사표…친명계 4파전
우원식·남인순·홍익표 단일화 가능성…추대 성사 여부도 관심

더불어민주당 2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어느 후보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결집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경선에는 3선의 김민석·홍익표 의원과 우원식(4선)·남인순(3선) 의원(이상 기호순)이 출사표를 던졌다. 모두 '친명'(친이재명)계 색채가 있는 후보들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표 단속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비명(비이재명)계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후보 4명 모두 이재명 체제 이후 친명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핵심보다는 범(凡)친명계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가결 사태 책임을 둘러싸고 비명계가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친명계가 당권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비명계와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들 모두 국회 경력이 오래된 만큼 친명·비명 가리지 않고 관계가 원만한 편"이라며 "비명계나 중립 성향 의원들이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가장 선명하게 '친명'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구속영장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수가 온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중 공천' 가능성 질문에도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답했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4월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험지인 '서초을' 출마를 선언하는 등 개혁적 색깔이 강하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대표를 맡고 있다.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남인순 의원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출마의 변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검찰 독재정권의 비열한 작태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2017년 원내대표를 지내 사실상 당내에서 처음으로 '원내대표 재선'에 도전하는 우 의원의 경우 친명 초선 의원들의 강력한 권유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민석·홍익표·남인순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됐던 이번 경선은 우 의원이 마감 직전 후보로 등록하면서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막판 단일화나 중도 포기가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우원식·남인순·홍익표 의원의 경우 더미래, 민평련 등 당내 지지 기반과 색깔이 겹쳐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당이 대혼란인 상황에서 경선보다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을 봉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제 1야당 대표 구속은 나라 위기 부를 뿐" 시민사회 원로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야당 대표의 구속은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뿐" 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기각이냐 구속이냐

오늘 영장심사…친명·비명 '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친명계는 우선 이 대표 구속에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여론전으로 구속영장 기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이 대표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한 반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분명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배신자 처단'까지 거론하며 징계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기류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는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한들 비명계의 입지가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구속의 책임을 비명계에 돌리며 비명계에 대한 친명계의 압박과 비난 수위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 친명 중심으로 뭉쳐 가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물러나서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후보들의 일성은 배신자 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계는 현재 내홍과 혼란의 원인은 결국 이 대표의 '말 바꾸기'에 따른 것이라며 친명계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조응천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했는데 이걸 번복하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계기로 확실하게 '방탄 정당' 이미지를 털고 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당 탈당 5864명…입당은 3만797명"

최고위 회의…정청래 "영장 기각 탄원 40만 넘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라는 죄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천 원짜리 한 장 돈을 먹었다는 똑 떨어지는 증거는 아직도 찾지 못했나 보다"며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도 애매모호한 배임죄로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아침 7시 15분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은 5864명, 입당한 사람은 이보다 5배 많은 3만797명"이라며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는 분노의 행렬이 벌써 3만명이라는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뤄 현재 비공식적 집계로도 40만이 넘는다고 한다"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도 광장의 촛불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도도한 물결을 형성했고 여의도는 그 뒤를 따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문재인을 흔들고 당을 뛰쳐나가는 분열 사태 때 10만 온라인 당원의 입당 러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선 "개인적 바람은 네 분의 후보들께서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것을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재의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외교청서 등 주장 철회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가 해당 교과서의 검정·승인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체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재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